

■ '여성후보 우대 조항' 지방선거 미칠 영향은

민주 20%가산점... 공천 중요 변수로

2차 예비후보 등록때 여성 대거 몰릴 가능성 일부선 "위헌 논란 일 만큼 많은 혜택" 반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후보자를 우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시되고 당원·당규가 등장하면서 공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과반 후보를 내는 경우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 공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천을 무효화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군 지역은 여성공천 할당제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여야 모두 당내 일부 반발을 사고 있지만 여야 합의사항이어서 이번 회기 내 통과가 유력시된다.

더욱이 민주당은 여성후보자에 대해 공천 심사 결과의 10~2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경선 시에도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을 수행한 여성후보자를 포함,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득표수나 득표

율의 20%를 가산하도록 하는 당규를 최고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이 같은 여성우대 조항은 광주·전남지역의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8일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출마 의사를 표시한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는 김선욱(광주 서구청장), 국령애(강진군수) 등 2명이며, 광역의원 후보는 김성숙·이명자·양혜령·조광향 광주시의원과 전 박금자 시의원, 유숙희 광산구의원 등 10명 내외다. 전남에서는 여수 성미숙씨 등이 도의원에 도전할 계획이다.

전체 선거지역을 고려하면 여성후보자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출마하려는 지역구에서는 여성우대 조항이 공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가의 일반적 분석이다.

여성 의무공천과 가산점 등 우대 조항을 주시해온 여성 후보자들은 많은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2차 예비후보자 등록에는 많은 여성 후보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여야 모두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남성 후보의 회생을 감수해야 한다.

비록 기초의원 공천에 이 조항이 이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당에서 여성 후보를 낼 지역구로 선정해버리면 남성후보들은 남은 자리를 놓고 다른 지역구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또 여성후보 지역구로 선정되지 못해 여성후보가 남성후보와 맞붙는다 해도 민주당의 경우는 여성후보에게 20%라는 가산점을 주고 있어 경쟁력이 아주 떨어지는 후보가 아니라면 여성후보가 월등히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민주당의 경우 지방의원 후보는 당원 경선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남성후보와 접전을 펼치는 여성후보는 어렵지 않게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의 여성공천 할당 조항과 당규상의 여성 가산점제는 위헌 논란이 일만큼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라며 "과거에는 비례대표로 지방의회에 진출하거나 남편의 중도하차에 따른 대리 출마를 하는 경우가 여성의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그 범위가 넓어져 여성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많이 탄생하게 됐다"고 전망했다.

/*박지경·최권일기자 jkpark@kwangju.co.kr



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의 자리로 찾아가 대화를 한 뒤 이석현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이 주류 "세종시 국민투표 해야" 친박·野 "수정안 철회·총리해임을"

靑 "국민투표 검토 안해"

정치권의 세종시 갈등이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 친이(친이명박) 주류가 8일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당론 변경을 위한 자유투표 등을 제시하고

나섰으나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 진영과 야권은 이를 일축하면서 오히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철회와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론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친이계 최대 모인인 '함께 내일로' 회장을 지낸 심재철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한 데 이어 정병국 사무총장이 이날 "국민투표·자유투표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류 일각에서는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한 국민투표안을 아예 6·2 지방선거에 걸어 국민적 심판을 받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같은 친이 주류 측의 제안은 2월 국회는 물론, 4월 국회에서도 수정안

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인 가운데 세종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빨리 털어내자는 '출구론'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친박계의 이정현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국민투표 대상도 아니다"며 "당론화정도 그렇고,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 총리가 세종시 문제를 제기했고 평지풍파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는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는 게 가장 쉽고 조용히 끝날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여권 주류의 국민투표 주장을 일축하면서 대정 부질문이 끝나는 직후인 오는 11일 정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관계자는 "자유선진당이 해임건의안 조기 제출하자는 강경론을 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민심의 흐름을 보고 결정하자는 신중론이 우세한 편"이라며 "설 연휴

를 전후로 해임건의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당 일부 의원들이 사견을 전제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국민투표나 무기명 투표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세종시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끝까지 설득해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월4일 조처된 여에서 열린 세종시 수정안 찬성 집회에 대전시민 500여명이 일당 3만원을 받고 동원됐고 다음주 6만원씩 줄테니 서울집회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보도됐다"며 "주동자가 누구이고 돈 출처가 어디인지 검찰은 분명히 규명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동영·신건 복당 민주당 의석 88석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난해 4월 재보선 공천 과정에서

탈당했던 정동영·신건 의원의 복당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두 의원의 복당이 10일 당무회에서 추진되면 민주당 의석은 88석으로 늘어난다.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방선거를 맞아 민주당의 단합과 통합을 위해 크게 하나가 되자는 정

신에서 정동영, 신건 두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다"며 "이제 통합된 힘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매진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열 의원의 복당의 경우 절차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공직자 선거개입 차단 '특별 감찰단' 발족

행안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선거개입 차단과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상시적인 감찰활동을 벌일 '특별 감찰단' 발족식을 가졌다. 감찰단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50개반, 150명으로 편성됐으며 공무원의 출석기와 평가르기, 선심·과시성 예산 집행, 공무원노조의 선거 관련, 선거철 규제·단속 업무 소홀, 민생 현안 방치 등의 행위를 점검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등 8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전·현직 공무원이 많이 출마할 것으로 보고 감찰단을 지난 4회 지방선거(10개반)에 비해 크게 늘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도간 교차 점검을 하고 감찰위원을 지자체에 상주시켜 감찰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라며 "위법·부당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MB "일자리 만들기 모범국 될 것"

"G20 정상회의 기업·민간 역할 중요"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제3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벗어났듯이, 일자리 만들기에 있어서도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긴장을 한시라도 늦출 수가 없다"며 "일자리 만들기야말로 최고의 서민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며 "미래를 선점하려는 각국의 노력은 거역할 수 없는 문명사적인 거대한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때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구에서 유일하게, 규칙을 따라가던 나라에서 규칙을 만드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 고비만 제대로 넘기면 '더 큰 대한민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합격을 원한다면 주소창에 "한빛고시학원"만 쳐보세요

가장 많은 수강생!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의 시설! 최강의 강사진! 압도적 1위 한빛!

7월 9일 9시 **고모이 일 3월 2일 시작반** **4월 10일 국가직시험** **특별기획특강** **모의고사 9월 문제풀이**

주요 특징: 1. 최강의 강사진, 2. 최다 합격자 배출, 3. 최고의 시설, 4. 최강의 강사진, 5. 압도적 1위 한빛!

» 1등은 이유가 있다!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 통하라!! 학원 선택이 합격을 결정한다!! «

호남유일 대학생 직장인을 위한 **9급 야간반 개설** | 한빛고시학원 최근 3년간 합격자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 **소방직** (모의고사) 소방특기교육장기 무시험합격반

마김유의 현재수강접수중 | **한빛고시학원** | 광주 북구청앞 | ☎ 234-0234